

한국적 ‘냉전전사’의 가능성

권혁은*

[서평] 허은(2022), 『냉전과 새마을: 동아시아 냉전의 연쇄와 분단국가체제』, 창비, 596쪽

1. 근대화된 마을 풍경에 겹쳐진 안보의 그림자

“1970년대 중반 무렵 새마을운동으로 집집마다 초가지붕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뀌고 마을 입구가 시멘트로 포장되며 넓혀졌다. 그러나 분단과 전쟁이 마을에 드리운 무거운 침묵은 있는 듯 없는 듯 거기 있었다… 3.1운동 때 햇불이 타올랐던 마을 마루터기에 향토예비군 무기고가 들어서고 동네 청년들은 별판을 가로질러 서치라이트 비추는 강변 초소에서 무장간첩의 침투를 막기 위해 야간근무를 섰다.”(5쪽, 이하 쪽수만 표기)

‘냉전과 새마을’, 이 두 단어만큼 한국현대사를 위로부터, 그리고 아래로부터 가장 적절하게 규정하는 표현이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두 단어가 동시에 사용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 책은 표지부터 강한 흥미를 유발한다. 긍정적 시선으로든, 부정적 시선으로든 농촌 근대화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새마을에 어떻게 냉전이 결합된 것일까.

그 이유는 위의 인용문에 제시한 「책머리에」의 첫 구절, 고향 마을 김포에 대한 저자의 회상을 통해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근대화된 마을

*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풍경에 겹쳐진 안보의 그림자에 대한 유년기의 기억은 필시 저자가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였을 것이다. 이 책은 1970년대 농촌 마을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공과 근대화라는 두 궤적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의식하에, 193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만주-남한-베트남-다시 남한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시공간을 가로지른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남한의 작은 농촌 마을에 침투한 식민과 냉전의 규정력을 짐작해 볼 수 있다.

2. 교차하는 3가지 연구사적 흐름: 만주국, 농촌, 대반란전

저자는 박정희와 로버트 톰프슨의 만남으로 시작한 「서장」에서 식민지기과 박정희 정권기 농촌 재편 정책 관련 연구, 신냉전사 연구, 만주국 연구, 동학농민전쟁 연구, 서구 식민제국의 강제수용소 연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남아시아 재정착촌 건설 및 대반란전 연구 등 광범위한 연구성과에 기반해 책의 문제의식을 풀어놓는다. 그것은 그만큼 이 책이 글로벌 냉전과 제3세계의 주체적 움직임, 그리고 위로부터의 기획과 아래로부터의 순응·변용·저항이라는 복합적 흐름을 포착하려 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런데 서평자가 보기에, 그중에서도 이 책은 3가지 주요한 연구사적 흐름의 교차점에 위치한다.

첫 번째는 만주국과 1960~1970년대 개발독재국가의 연속성을 이야기하는 흐름이다.¹ 박정희 자신이 만주군 출신이었으며, 한국군과 5·16 군사

1 대표적으로 다음의 저작을 들 수 있다. 강상중·현무암(2012),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 다카키 마사오, 박정희에게 만주국이란 무엇이었는가』, 책과함께; 한석정(2016), 『만주 모던: 60년대 한국 개발 체제의 기원』, 문학과 지성사; Carter J. Eckert(2016), *Park Chung Hee and Modern Korea: The Roots of Militarism*,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정부의 핵심에 만주군 출신들이 포진했었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만주국의 행정관료와 경찰로 복무하며 “일제의 반소·방공 국방국가 건설 기획에 세례”를 받았거나 항일무장투쟁에 참여한 다수의 조선인들도 존재했다(24). 따라서 한석정은 『만주 모던』에서 만주국 관동군에 의한 신속한 산업화와 도시건설의 에토스가 1960년대 군부뿐만 아니라 교육, 이념, 문화 등 제 부문에 이어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사회학자인 한석정의 저작이 ‘에토스’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포괄적이고 이론적인 특성이 강한 반면, 역사학자인 저자는 만주국의 농촌 지배 정책에 초점을 맞춰 만주국의 군과 경찰, 협화회 지부 등에 소속된 조선인들이 집단부락과 보급제 등을 경험했고, 이것이 해방 이후 제주도과 지리산 등에 적용되었다는 점을 촘촘하게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만주국 경찰 고위직 출신인 홍순봉과 간도특설대 출신 신현준이 4·3항쟁 진압에, 만주군 출신 정일권·백선엽·김백일 등이 한국전쟁 전후 지리산 지역 토벌 작전에 참여했다. 더욱이 정일권과 예관수는 유격전 교범을 출판하기까지 했다. 만주군 출신들은 진압 과정에서 집단부락을 건설했으며, 비민분리와 선무공작을 병행하는 대유격전을 실행하고 관련 교리를 설파했다.

저자는 이와 같은 만주국의 유산이 1972년 분단국가체제 건설 과정에서 박정희, 정일권, 임충식 등 만주군 출신 최고위 안보정책 책임자들에 의해 재등장한다고 설명한다. 1968년 11월 울진·삼척 무장부대 침투 사건 이후 산간벽지 화전민들을 모아 만든 대공전략촌, 1976년 반상회를 정례화시키며 실시된 ‘5가구 감시체제’는 만주국의 농촌 지배 정책을 빼놓고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만주국의 유산이 1950~1960년대라는 단절적 시간을 넘어 갑자기 1970년대 되살아났다는 설명을 선뜻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책은 만주국의 유산이 아무런 매개 없이 등장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만주국의 유산은 1950~1960년대 동남아시아에서 전개된 냉전, 그리고 북한의 ‘5호담당책임제’ 등의 매개물을 통해 1972년 분단국가체제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처럼 이 책은 기존의 연구들처럼 만주국과 남한을 직접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만주국-동남아시아-북한-남한의 연쇄 과정을 통해 만주국의 유산을 설명한다. 즉, ‘밑으로부터의 냉전’에 초점을 맞춘다면 1930년대 만주국과 1970년대 남한 간의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은 일본제국주의의 유산에만 주목한 기존의 연구와 확연한 차이를 가진다. 후술하겠지만, 저자의 이러한 설명 방식은 미국의 동남아시아 냉전 전략에 대한 연구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홍석률이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냉전의 지역적 다양성과 제3세계 내부의 흐름을 중시하는 신냉전사의 문제의식과도 맞닿아 있다.² 기존 만주국 연구과의 차이는 바로 그러한 문제의식이 낳은 결과일 것이다.

두 번째는 해방 이후 한국 농촌사회의 변화 과정을 규명하고자 한 흐름이다. 해방 이후 농촌 사회는 좌우투쟁의 장이었고, 그 재편 과정은 곧 체제 변동과 직결되었다. 한국전쟁을 거치며 마을이라는 일상생활의 공간은 광범위한 학살의 장(場)이 되었고, 그 결과 마을의 내적 질서가 크게 변화하거나 ‘재전통화’와 같은 현상이 등장했다. 농촌사회의 변화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이처럼 해방~전쟁기에 주목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960년대 이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³ 그중 가장 대표적 성과로는 김영미의 연구가 있다. 그는 농촌마을 내에서 성장한 근대화 주체들의 자생적 노력이 새마을운동을 통해 국가적으로 전유되었다는 점을 구술 자료를 통해 밀도 있게 분석했다.⁴ 이후 나온 새마을운동 연구들도 김영미의 문제의식을 따라 근대화 과정에서 국가-농촌-농민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

2 홍석률(2022), 「밑으로부터의 냉전, 유격전과 대유격전: 허은, 『냉전과 새마을: 동아시아 냉전의 연쇄와 분단국가체제』(창비, 2022)」, 『역사문제연구』 48권.

3 해방 이후 한국 농촌사회의 변화 과정에 대한 연구사 정리는 다음을 참조. 김영미(2022), 「해방이후 한국 농촌사회의 변화: 최근 20년 역사학계의 연구 동향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총』 57.

4 김영미(2009), 『그들의 새마을운동』, 푸른역사; 김영미(2016), 「어느 독립운동가 마을의 새마을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6.

가 많았다.⁵

그러나 저자는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농촌 재편정책을 '새마을운동' 중심으로 파악해 온 학계의 경향에 비판적 시선을 보내며, 농촌을 "근대화의 열망을 분출한 곳으로만" 기억하는 것은 "냉전·분단시대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탈구된" 인식이라고 주장한다(19). 따라서 저자는 충청북도 괴산군,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지역방위체제가 구축되는 양상을 추적한다. 1970년대 후반, 지역사회에서는 지역방위 조직인 향토예비군/민방위대-군관민 협의체인 지역방위협의회-총력안보체제 대의기구인 통일주체국민회의 삼자가 주축이 된 지역방위체제가 자리 잡았다. 그리고 지역 공공기관장들과 유지들은 이런 지역방위체제에 기반을 두고 지역사회의 질서를 이끌어 갔다.

또한, 1·21사태 이후 박정희 정부는 안보 취약지구에 대공전력촌을 건설했으며, 유신선포 전후로는 아예 전국 이·동장에 대공요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대공조를 운영했다. 그리고 모범새마을을 선정해 대공새마을을 확산시키려고도 했다. 저자는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후에도 '냉전의 새마을'을 건설하려는 기획은 지속했다고 이야기한다. 괴산군의 사례를 분석했을 때 이·동장과 반장이 대부분 대공요원과 대공조장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즉,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남한의 농촌은 근대화 기획이 투영된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반공과 감시의 기획이 투영되었다는 것이 저자의 핵심적인 주장이다. 반상회와 5가구조 감시망 같은 만주국의 유산은 동남아시아와 한반도 냉전이라는 매개물 속에서 그 기획의 일부로 되살아났다.

세 번째는 1960년대 미국의 제3세계 냉전 전략이었던 대반란전과 근대화론을 분석한 연구들이다. 동남아시아와 남미, 중동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대반란전이 제3세계 근대화 정책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 즉 미

5 대표적으로 국가와 농촌사회의 상호작용, 농촌사회의 자본주의화 등을 분석한 공동연구물인 다음 저작을 참조할 수 있다. 오유석 위음(2014), 『박정희 시대의 새마을운동: 근대화, 전통 그리고 주체』, 한울.

국의 제3세계 개발 정책과 내부안보 지원 정책이 동전의 양면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국외에서 다수의 연구성과가 제출되었다.⁶ 특히나 대표적 근대화론 연구자인 마이클 레이섬(Michael E. Latham)은 케네디 정부가 “아래로부터 그리고 위로부터 지엄 정권을 근대화시킨다는 거대한 계획의 일환”으로 전략촌 계획을 시작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전략촌 계획은 케네디 정부가 “새롭게 농촌과 농민을 강조”하며 “군사 행동과 사회공학 전략을 통합”해 만든 “포괄적 대반란적 프로그램”이고, “광범위한 국가 건설 노력의 일환”이었다.⁷

이 책의 문제의식은 이 세 번째 연구 경향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흐름이 주목한 만주국과 두 번째 흐름이 주목한 농촌 사이의 매개물로 1950~1960년대 동남아시아와 한반도에서 전개된 냉전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자는 지속적으로 ‘안보와 개발의 결합’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만주국의 조선인 방공전사들은 지역사회 개발과 근대화 전략을 고민할 수 없었던 반면, 1960년대 이후 한국군은 베트남전에 개입하며 대유격전과 근대화를 유기적으로 사고할 수 있었다. 한국군은 베트남전에서 남베트남 정부의 평정계획을 목격했고, 대민활동을 통해 ‘안보의 확립을 전제한 개발의 달성’이라는 원리를 체득했다. 이 책이 1·21사태 이

6 라틴아메리카에서 전개된 근대화 정책과 대반란전의 결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Stephen G. Rabe (1999), *The Most Dangerous Area in the World: John F. Kennedy Confronts Communist Revolution in Latin America*,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Stephen G. Rabe(2012), *The Killing Zone: The United States Wages Cold War in Latin America*, Oxford University Press. 라틴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중동에서 전개된 근대화 정책과 대반란전의 결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Michael E. Latham (2011), “Ch.5 Counterinsurgency and Repression: Guatemala, South Vietnam, and Iran”, *The Right Kind of Revolution*, Cornell University Press; 마이클 레이섬(2011), 권혁은 외 역, 『근대화라는 이데올로기』, 그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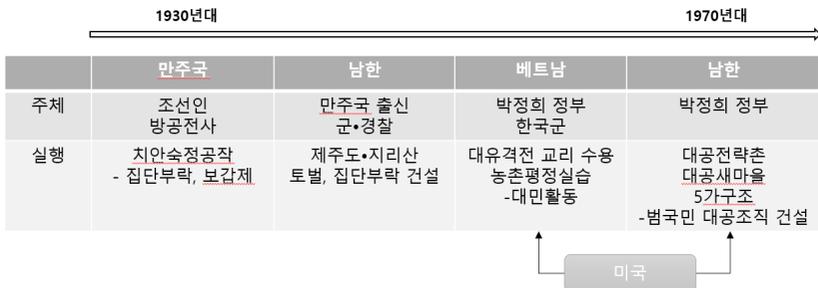
7 마이클 레이섬(2011), p. 294·315·339. 그 외 전략촌 계획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Philip E. Catton (2002), *Diem's Final Failure: Prelude to America's War in Vietnam*, University Press of Kansas; James M. Carter (2008), *Inventing Vietnam: The United States and State Building, 1954-1968*, Cambridge University Press

후 만들어진 '대공전략촌'과 '대공새마을'에 주목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안보와 개발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동남아시아 대만란전과 남한의 농촌이 연쇄적으로 연결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저자의 주장처럼 실제로 남베트남 정부가 촌락재건 계획에서 강조한 '자조와 협동'은 박정희 정부가 새마을운동에서 강조한 '근면, 자립, 협동'과 너무나 유사하다. 따라서 '냉전과 새마을'은 이상의 교차하는 연구사적 흐름과 문제의식을 대표하는 제목이라고 할 수 있다.

3. 냉전과 새마을은 정말 결합했던 것일까

이 책은 광범위한 자료에 기반해 폭넓은 시공간과 다양한 주체를 가로지르며 상술한 바와 같이 복합적 연구사적 지형 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매우 흥미롭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읽기가 쉽지는 않다. 따라서 이 책의 내용을 도식적으로 정리해 보면 [그림 1]처럼 나타낼 수 있다.

그림에서 정리된 내용 외에도 이 책은 1950~1960년대 군부의 인식을 추적하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한다. 저자는 정부수립 이후 일제 국방국가론이 미국 주도 진영체제와 결합되는 과정, 5·16쿠데타 전후 '대전략' 개념을 통한 군의 국가경영에 대한 인식, 그리고 간접침략론이 확산되는 양상,



[그림 1] 『냉전과 새마을』의 구성

1960년대 후반 중국의 인민전쟁 노선과 북한의 민족해방전쟁 노선을 연계에서 파악하는 군부 인식의 대두, 1·21사태 직후 비상대권론의 등장 등을 통해 시기별로 군부가 어떻게 5·16쿠데타와 1972년 분단국가체제 수립에 관여했는지를 이야기한다. 더욱이 각 시기마다 군 내에서도 ‘도외국가’ 건설론, 군사력의 ‘민주적 문민통제’론 등 군의 정치개입 및 분단국가체제 건설과 상반되는 논의가 존재했다는 설명은 군부 내에서도 다양한 지향이 존재했다는 점을 보여 준다.

한국현대사 속 군의 역할에 주목한 기존의 연구들은 군의 움직임을 대부분 개인의 이력이나 관계 중심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군부의 인식에 대한 분석은 깊이 있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이 책의 분석은 또 다른 차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이었다. 그러나 위의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한편으로 궁금하면서도 곰곰이 생각해 볼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베트남에서 남한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분명 베트남의 대반란전과 남한의 농촌 지역방위체제 간에는 유사점이 존재한다. 남베트남 정부는 5가구조 활용, 신분증 발급, 촌 검열위원회부터 지역 방위위원회 등을 설치해 지역 감시체제를 수립했고, 박정희 정부 역시 유사한 지역 감시체제를 수립했다. 1·21사태 이후 건설된 ‘대공전략촌’이라는 용어 역시 안보정책 차원에서 남베트남과 한국 간에 상당한 연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문제는 과연 베트남 대반란전의 핵심 내용인 ‘안보와 개발의 결합’이 남한에서도 유기적으로 이루어졌는가가 잘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5장에서 저자는 한국군이 미국과 남베트남 정부가 실시한 평정정책을 숙지했다고 설명한다. 또한, 파병 후 시간이 흐르며 한국군 작전에서 민사심리전 비중이 늘어났으며, 그 내용은 마을 하부조직 제거에서부터 개발까지 포괄했다. 그러나 책에서는 이러한 주장과 상반되는 서술도 많이 발견된다. 한국군 민사심리전의 핵심은 실제로는 ‘강한 군사력의 과시’였던 것으로 보이며(257), 대민활동은 마을 정보 수집 차원이거나, 한국군의 이해관계

를 충족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274). 또한, 철군 직후인 1974년 주월한국군사령부가 지역개발에서 안보 우선 원칙을 내세웠다는 사실(286)은 동일하게 베트남전에 참여한 미국, 남베트남, 한국 간에 대반란전에 대한 인식의 편차가 존재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더욱이, 1·21사태 이후의 대공전략촌 건설의 주된 내용은 농촌 개발보다는 반공계몽과 신고체제 수립이었던 것으로 보이며(477-479), 모범 대공새마을 역시 대공감시체제의 수립이 핵심이었다(488). 이는 비록 거대한 방위시설로 건설되었고 궁극적으로는 실패했을지라도, 내부에 근대적 사회기반시설을 만들고 선거를 통해 주민들을 국민국가에 통합시키려 했던 전략촌 계획과 상당한 차이를 가진다.

대공전략촌이나 대공새마을 사업에서 개발과 관련된 내용이 미미했기 때문에 '안보와 개발의 결합'이 남한에서도 유기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새마을운동과 지역방위-감시체제 수립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책에서는 "1975년 중반 피산군의 행정리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거의 전부가 대공지도요원을 겸했고, 마을 반장은 대공조장을 맡았다"고만 설명하고 있다(488). 게다가 전국 약 3만 3,000개의 마을 대부분이 새마을운동에 참여한 반면, 대공전략촌과 대공새마을은 상대적으로 소수였던 것으로 보인다.⁸ 새마을운동의 구호가 베트남 전 농촌 평정정책에서 사용된 용어와 유사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남베트남 대반란전과 새마을운동, 그리고 남한의 지역방위-감시체제 간에 유기적 관계가 있다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또한, 베트남에서 평정계획을 숙지하고 민사작전을 실행한 주체는 군이었지만 남한에서 지역방위-감시체제를 수립한 주체는 내무부였다. 저자는 향토예비군이 지역사회 개발과 새마을운동에 개입했다고 언급하지만, 군이 민사작전 차원에서 농촌개발에 참여했다고 보기에는 자세한 설명이

8 3만 3,000여 개의 마을 대부분이 새마을운동에 참여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김영미(2017), 「새마을운동에 대한 새로운 이해: 이제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 『한국학논총』 48, p. 329.

부족하다(446-447). 만약 저자가 개발이 아니라 안보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밑으로부터의 냉전’, 혹은 농촌지배정책을 이야기하려 한 것이라면 저자가 사용하는 ‘새마을’이라는 용어와 ‘새마을운동’ 간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위와 연결해 두 번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책은 전체적으로 ‘대유격전’과 ‘대반란전’을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 만주국에서 실행된 대유격전이 농촌부흥정책 등 개발의 내용을 포함한다는 서술(81)에서 알 수 있듯이, 책에서는 ‘안보와 개발의 결합’이 대유격전과 대반란전 모두를 관통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대유격전은 ‘Counter guerilla warfare’의 번역어이며, 대반란전은 ‘Counterinsurgency’의 번역어이다. 사전적으로도 ‘대유격작전’은 ‘침투에 성공한 후 근거지를 확보하거나 잔류하여 유격전을 수행하는 적을 소탕 및 격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작전’이며 ‘대반란전’은 ‘현존하는 정부를 전복시킬 목적으로 전복활동 및 무력행사를 정부가 격퇴시키기 위해서 취하는 군사, 준군사, 정치, 경제, 심리 및 대민활동’으로 정의된다.⁹ 물론, 대유격작전의 정의에는 ‘군·관·민 통합으로 지역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평정작전’이 포함된다.¹⁰ 그러나 대반란전은 사전적으로도 대유격전보다 광범위하게 정의되며, 실제로도 평정작전의 차원을 넘어서는 근대화 기획부터 게릴라전으로 국한되지 않는 시위 진압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¹¹

대유격전과 대반란전 개념이 등장한 시기에도 차이가 있다. 대유격전은 제2차 세계대전 전후로 대게릴라전이라는 차원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반면, 대반란전은 케네디 정부가 냉전 전략의 일환으로 제시하며 광범위하

9 합동참모본부(2003),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p. 115, 117.

10 합동참모본부(2003), p. 117.

11 베트남에서 실시된 대반란전은 실제로 평정작전과 잘 구분되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 라틴아메리카에서 실시된 대반란전은 ‘진보를 위한 동맹’ 같은 거대한 개발 계획부터 대중 시위 진압 작전까지를 포괄했다[Stephen G. Rabe (1999)].

게 사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800년부터 2019년까지 출판된 모든 인쇄물의 텍스트에서 특정 단어의 등장 빈도를 보여 주는 구글 엔그램 뷰어(<https://books.google.com/ngrams/>)를 통해서도 그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counter guerilla'라는 용어는 1900년을 전후해서, 그리고 1940년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도 사용되지만 'counterinsurgency'는 거의 사용되지 않다가 1960년 이후 등장 빈도가 급증한다.¹² 물론, 만주국과 남한의 농촌 마을에 초점을 맞춘다면 대유격전과 대반란전이 전개된 양상에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양 개념의 차이를 명시한 후 혼용해서 사용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이 책은 미국의 대반란전 정책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므로 대유격전과 대반란전을 혼용해 사용하는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각 부와 장을 연결하는 '연쇄'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책은 만주국-남한-베트남-남한 등 분석된 각각의 공간을 직접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연쇄'라는 표현을 통해 연결하고 있다. 1930년대 만주국과 1970년대 남한의 농촌, 그리고 냉전과 새마을간의 관계가 '연쇄'를 통해 분석되고 접합된다. 이러한 구성은 문서와 실증에만 토대를 둔 역사학적 서사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방식으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기존의 구성방식과 서사에 익숙한 독자들에게는 여러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든다.

예를 들어 만주국 조선인 방공전사들과 1970년대 남한 농촌사회를 재편한 박정희 정부의 주체들은 최고위 관계자 몇몇을 제외하고는 세대상 큰 차이가 있는데 만주국의 유산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인지, 매개물을 통해 연쇄되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만주국이 1970년대 남한 농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 마찬가지로 만주국 조선인들과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국군은 일부를 제외하고 주체와 세대 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 양

12 엔그램 검색 결과 그래프는 지면관계상 생략한다.

자의 경험이 접합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의 의문이 그것이다. 독자로서는 ‘연쇄’적 구성방식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1970년대 남한의 농촌지배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만주국 출신 조선인들이 만주국의 경험을 어떻게 고민했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다. 광범위한 시공간을 포괄하지만, 각 시공간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한다는 점은 이 책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4. 한국적 ‘신냉전사’의 가능성

이 책에 대한 기존의 서평에서 홍석률이 지적한 것처럼, 1990년대 이후 ‘신냉전사’ 연구들은 냉전연구의 탈중심화를 지향하며 제3세계를 적극적으로 냉전의 무대로 가져왔다. 그러나 서구에서 전개된 신냉전사 연구들은 여전히 강대국의 제3세계 개입주의를 분석하는 경향이 강하다.¹³ 그러다 보니 제3세계 국가 간의 관계, 다시 말하면 냉전의 주변부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깊이 있게 이루어지지 못했다.¹⁴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는 진영의 수립과 대치를 중심으로 냉전을 획일적으로 이해하는 접근에서 벗어나서 20세기 후반 분단시대를 규정한 냉전의 고유한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21)는 주장은 저자 역시 그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이 책을 집필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책은 한국적 ‘신냉전사’의 가능성을 제기한 최초의 연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¹⁵ 한미관계를 중심에 놓았던 전통적 한국현대사 연

13 홍석률(2022), pp. 418-419.

14 류기현도 오드 아르네 베스타의 『냉전의 지구사』에 대한 서평에서 이와 같이 지적한 바 있다. 류기현(2020), 「냉전 연구의 탈중심화를 향하여 [서평] 오드 아르네 베스타 저, 옥창준·오석주·김동욱·강유지 역(2020), 『냉전의 지구사: 미국과 소련 그리고 제3세계』, 에코리브르, 814쪽.」, 『인문논총』 Vol. 77 No. 3, p. 455.

15 김도민도 유사한 문제의식을 통해 1948~1968년 간 남·북한의 중립국 외교에 대한 연구

구에서 벗어나 만주-한국-베트남-미국이 어떻게 상호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후학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책에 등장하는 여러 사건, 정책, 인물, 자료 등을 각각 촘촘하게 연구한다면 머지않아 1972년 분단국가체제가 구조되는 과정을 통해 한국적 '신냉전사'상(像)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1960~1980년대 민주화운동 억압과 냉전의 관계를 연구하는 서평자 역시 이 책을 통해 다양한 연구주제를 발견하고 문제의식을 확장시킬 수 있었다. 저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싶다.

참고문헌

- 강상중·현무암(2012),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 다카기 마사오, 박정희에게 만주국이란 무엇이었는데가』, 책과함께.
- 김도민(2020), 「1948~1968년 남·북한의 '중립국' 외교 연구」,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영미(2022), 「해방이후 한국 농촌사회의 변화: 최근 20년 역사학계의 연구 동향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총』 57.
- 김영미(2017), 「새마을운동에 대한 새로운 이해: 이제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 『한국학논총』 48.
- 김영미(2016), 「어느 독립운동가 마을의 새마을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6.
- 김영미(2009), 『그들의 새마을운동』, 푸른역사.
- 노영기(2004), 「5.16쿠데타 주체세력 분석」, 『1960년대 한국의 근대화과 지식인』, 선인.
- 레이섬, 마이클 (2011), 권혁은 외 역, 『근대화라는 이데올로기』, 그린비.
- 류기현(2020), 「냉전 연구의 탈중심화를 향하여 [서평] 오드 아르네 베스타 저, 옥창준·오석주·김동욱·강유지 역(2020), 『냉전의 지구사: 미국과 소련 그리고 제3세계』, 에코리브르, 814쪽.」, 『인문논총』 Vol. 77 No. 3.
- 오유석 엮음(2014), 『박정희 시대의 새마을운동: 근대화, 전통 그리고 주체』, 한울.
- 한석정(2016), 『만주 모던: 60년대 한국 개발 체제의 기원』, 문학과 지성사.
- 합동참모본부(2003),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 홍석률(2022), 「밀으로부터의 냉전, 유격전과 대유격전: 허은, 『냉전과 새마을: 동아시아

를 출판했다. 김도민(2020), 「1948~1968년 남·북한의 '중립국' 외교 연구」,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냉전의 연쇄와 분단국가체제』(창비, 2022)」, 『역사문제연구』 48권.

Carter, James M. (2008), *Inventing Vietnam: The United States and State Building, 1954-1968*,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tton, Philip E. (2002), *Diem's Final Failure: Prelude to America's War in Vietnam*, University Press of Kansas.

Eckert, Carter J. (2016), *Park Chung Hee and Modern Korea: The Roots of Militarism*,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Latham, Michael E. (2011), *The Right Kind of Revolution*, Cornell University Press.

Rabe, Stephen G. (2012), *The Killing Zone: The United States Wages Cold War in Latin America*, Oxford University Press.

Rabe, Stephen G. (1999), *The Most Dangerous Area in the World: John F. Kennedy Confronts Communist Revolution in Latin America*,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